주소지 이탈·위장전입해도 '속수무책'

지방의원·교육위원 자격 점검 없다

조사·처분 의장 승인·결재 있어야 가능

범법 행위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시급

최근 전남도교육위원이 선거구 주소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위원직을 박탈당하고, 상당수 위원들이 위장전입을 한 것〈광주일보 10월 9일자 6면〉으로 드러나면서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유지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인 지방의원과 교육위원 등은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들을 감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 7조)은 지방의원이 시·도간 주소지를 벗어나면 피선거권 박탈로 자동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위원도 이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 법에는 지방의원의 퇴직 등 신분상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은 해당 의회 장(의장)의 승인 결재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결국 지방의원의 경우 잘못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고 처리토록 돼 있어 감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의사국 관계자는 "교육위원의 신분변화나 조사권은 의장 결재 사항"이라며 "의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각 위원들의 개인 신상 조사나 퇴직 조치 등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지방의회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선거구 주소지 이탈로 퇴직 조치된 나 모 전 교육위원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해당 행위를 저질렀지만, 3년여만인 지난 달 8일 김성 의장 권한 대행의 결재에 따라 갑자기 퇴직이 이뤄졌다. 나 전 위원의 자리는 선거 당시 차점자였던 김목씨가 승계했다.

그동안 나 위원이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상당수 교육위원과 도 교육청 의사국에서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3년여만에 공식화된 것은 의장선거를 둘러싼 위원들간 갈등 때문이었다.

또한 전남교육위원 9명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상으로만 전남일 뿐 사실상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여부의 확인도 의장의 결재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지방의원인 시·도·구·군의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신분변동이나 범법행위 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의원들이 자신의 신분변동 등을 자진 신고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 21 박재만 실장은 "자신(지방의원)들의 잘못 여부를 스스로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결국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이 이들에 대한 감시나 견제를 해야한다는 말인데,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놓은 지방의원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한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종플루 의심 복용도중 음성판정

타미플루 먹을까 말까

의사마다 견해 엇갈려

타미플루가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방되면서 복용 도중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복용 중단과 등교 여부를 놓고 의사마다 견해가 엇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타미플루를 즉시 복용토록 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발열 증상이 지속되면 일단 타미플루를 먹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타미플루 복용을 중단해야 시기다. 하루 두 차례 복용하는 타미플루는 5일분이 처방되면 신종플루 환자는 도중에 증세가 호전되더라도 5일분을 모두 먹어야 한다.

그러나 타미플루를 복용하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견해가 엇갈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일단 복용을 시작했다면 음성일지라도 5일분을 먹어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다. 반면 소수의 의사들은 음성판정이 나면 이후 복용은 곧바로 중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의견이 정확한 지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보건소나 상당수 병원들은 '무조건 5일분 복용'을 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타미플루 복용시 일부이긴 하지만 구토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불안감, 특히 약이 쓴 탓에 유아들의 경우 필사적으로 먹지 않으려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음성 판정 환자의 경우 일부 의사들은 등교해도 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의사들은 타미플루를 모두 복용한 다음 등교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모 중학교에서는 타미플루를 이틀째 복용하다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이 등교하자, 일부 학생들이 "옮을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 다툼이 일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참 〈7954〉 김종두

車 저수지 추락 2명 숨져

14일 오전 10시40분께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에서 조모(61)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저수지에 빠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조씨의 아내 김모(56)씨 자매가 숨졌으며, 조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탈출했다. 조씨 등은 산으로 약초를 캐러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법 개정 후 입항 물품 인상된 세율 적용해야" 광주고법 판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개정법 시행일 직전에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수입물품의 입항 시점이 법 개정 이후라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15일 한국가스공사가 광양세관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공사는 독점적 LNG 수입자로서, 세율 인상 시점을 알았는데도 이를 피하려고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했다"며 "세관이 법 개정 이후 인상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법 개정에 따른 특소세 인상을 이틀 앞둔 2005년 12월 30일 수입 LNG에 대한 수입신고를 해서 kg당 40원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가스를 실은 선박은 법 개정일인 2006년 1월 1일에야 도착했다.

이에 광양세관은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 kg당 60원, 총 46억4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총각무 수확 김장철을 앞둔 15일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갓 수확한 총각무(알타리무)를 출하하기 위해 화물차에 옮겨 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부산 사격장 불 일본인 8명 등 10명 사망

지난 주말, 6명은 중화상

14일 부산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불이 나 일본인 관광객 8명 등 모두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불이 난 사격장은 평소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일본인들의 피해가 컸다.

이날 오후 2시26분께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5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한 가나다라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아라키 히데테루(36·荒木英輝) 씨 등 일본인 관광객 8명을 포함 모두 10명이 숨지고, 하라다 요헤이(37·原田洋平) 씨 등 일본인 3명과 종업원, 여행사 가이드 등 6명이 중화상을 입고 부산대와 동아대, 하나병원 등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은 2층 사격장 휴게실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중태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불은 사격장 내부 277.43㎡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만에 꺼졌다. /연합뉴스

복지시설 '플루 한파'

후원금·위문품·자원봉사자 20~30% 줄어

광주지역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한파(寒波)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침체에 신종 플루 확산까지 겹치면서 후원의 발길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지역 아동보육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경기 불황과 신종 플루 여파로 후원금과 위문품은 물론 자원봉사자까지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줄어들었다.

아동복지시설인 광주시 남구 송하동 신애원의 경우 지난 추석을 전후해 후원금과 기탁물품 등이 예년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애육원도 원생 113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예년보다 후원금이 상당폭 감소해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북구 동림동 광주장애인 복지관은 후원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올해 체육대회·음악회 등 각종 가을맞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해 치렀다.

후원이 줄어들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신종 플루 감염 위험성이 커지면서 자원봉사자가 대폭 감소했고 일부 복지시설은 방문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 신애원은 원생들의 신종 플루 감염을 우려해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정기봉사팀의 방문을 전면 제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내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손 내밀기도 어렵다. 절약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루저 발언 '미수다' 손배청구 줄이어

쌍나팔

○…출연자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패배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KBS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와 관련해 K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모(30)씨가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총 11건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

○…KBS는 지난 9일 '미수다'에 출연한 이모씨가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180㎝는 돼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제작진을 교체키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인터넷 논란과 손배 청구 등 잇단 악재에 곤혹스런 표정. /연합뉴스